

[종합·해설]

김 광 광주지방국세청장 신년 인터뷰



▲영암 출신 ▲광주일고 ▲
육사 34기 ▲광주세무서 총무
과장 ▲해남 세무서장 ▲대통
령비서실 행정관 ▲서울청 조
사 2국장 ▲국세청 법인납세국
장 ▲광주지방국세청장

“돈가뭄 지역 기업들 세금징수 9개월 유예”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을 파악해 최장 9개월까지 세금 납기연장이나 징수 유예를 실시하고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김 광(54) 광주지방국세청장은 8일 광주일보와의 신년 인터뷰를 통해 “우리지역 대부분 기업들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데 이를 기업을 돋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선박판매 부진 등의 영향으로 이지역 기업들 대부분이 유동성위기를 겪고 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들은 거의 법인세 등 세금을 일시에 납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처럼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을 적극적으로 파악해 최장 9개월까지 납기연장이나 징수 유예를 실시하고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등 불가피한 세무조사의 경우에도 조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영업에 지장을 최소화하겠다.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지역전략산업과 20년 이상 지역 경제 발전에 공헌하며 성실하게 납세 한 향토기업에 대해서는 명백한 세금 탈루가 없는 한 2010년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해 세무조사가 기업경영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배려할 생각이다.

전남·북 지역에 새로운 경제도약을 하는데 견인자 역할을 하겠다. 납세자를 섬기는 세정을 위해 노력하고 납세자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다.

지난해 성공적으로 집행된 종합부동

산세 환급, 유가환급금 지급은 물론 일하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도입한 근로장려세제 등 새로운 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하겠다.

—광주청 조직 운영 방침은?

▲납세자를 섬기는 세정운영을 가치로 해 광주청의 역량을 결집하겠다. 모든 납세자에게 One-Stop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납세자 편의 위주로 제도와 절차를 개선하고 종사 직원들에게 대한 정기적인 친절교육과 업무 전문화를 통해 납세자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는 국세행정이 되도록 하겠다.

납세자가 접이나 사무실에서 이용할 수 있는 홈택스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적극홍보해 세무서 방문 민원인을 축소시켜 나갈 계획이다.

—을 광주지방 국세청 세정 운영의 주된 방향은?

—경제위기를 조속히 극복해 광주,

“설 전에 부가세 조기 환급…경제회복 때까지 세무조사 유예”

김 청장은 특히 “지난해 2분기 확정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자 가운데 자금 사정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설 명절 이전에 환급금을 지급하는 등 자금 난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청장과의 일문일답.

—지역업체들이 세금납부와 관련해 가장 많이 애로를 호소하는 부분은 무엇이고 애로사항은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지.

▲최근 미분양 아파트 증가, 자동차,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수시조사

특히 이번 설 대목을 맞아 ‘지난해 2분기 확정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자 중 자금 사정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설 명절 이전에 환급금을 지급토록 하겠다. 매월 25일까지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월별 조기 환급자에 대해서는 신고 당월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토록해 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

—지역경제를 돋는 세정을 평가했다고 했는데.

▲우선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수시조사

일시적 자금난으로 고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국세환급금 조기지급 등 최대한 자금편의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사업용자산·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유예와 사업용 자산 공매유예를 적극 시행해 기업의 정상 조업도 재고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

—을 광주지방 국세청 세정 운영의 주된 방향은?

▲경제위기를 조속히 극복해 광주,



정부가 최근 발표한 녹색뉴딜 정책이 영산강을 포함한 4대강 살리기 등 기존 정책을 되풀이하고 있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열린 영산강 생태하천사업 착공식. <광주일보 자료사진>

알맹이 없는 ‘녹색뉴딜’

지역현안 사업 재탕 삼탕 장기 고용 효과도 기대난

정부의 ‘녹색뉴딜 정책’에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무늬만 녹색 뉴딜’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애초 경기부양과 고용창출이라는 취지와 달리 대부분 사업이 토목·건설에 치우쳐 고용효과가 단기에 그칠 우려가 있고, 시설·첨단산업 등이 빠져 있어 미래 성장동력 산업을 기대했던 지역민들의 여망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녹색뉴딜 사업은 ‘녹색 사회간접자본’, ‘저탄소·고효율 산업기술’, ‘친환경·녹색생활’, 부문 9개 핵심사업과 27개 연계사업 등 모두 36개 사업을 추진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2012년까지 모두 50조 원을 투입해 95만 6천여 명에게 일자리를 공급하겠다는 복안이다.

문제는 주요 사업 대부분이 광주시와 전남도 등 지역체계가 추진 중인 현안 사업이라는 점이다. 또 정부가 그 동안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나 ‘차세대 에너지 사업’ 등으로 채택해 자체에 지원중인 사업도 상당수다. ‘녹색 SOC사업’에 포함된 4대강 살리기, 생태하천 복원사업,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시는 현재 광주천 자연형 하천복원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도로 기반 시설물 전산화는 전국 지역체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친환경 그린시설 투자 부문도 사정

은 마찬가지. 산림 재해예방 및 훼손 산림 복원, 녹색 숲 가꾸기, 공공시설 LED조명 교체, 건축물 유풍 및 벽면 녹화사업, 폐교 등 유류시설 생활밀착형 문화공간 활용사업도 자체 사업을 재탕한 것이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도 수년 전부터 광주시와 전남도가 매년 추진하는 ‘단기사업’이다.

또 이를 대형 사업들이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데다 대형 건설 공사 위주여서 장기적인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50조원의 사업 예산 가운데 4대강 살리기 13조8천억원, 경부·호남고속철도 조기 완공사업 9조6천억원이 책정되는 등 전체 사업비 50조원에 가까운 재원이 쓰일 예정이다.

민주 “녹색뉴딜은 숫자놀음에 불과”

민주당은 8일 정부가 2012년까지 50조원을 투입해 9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힌 녹색뉴딜 정책에 대해 “재원조달계획이 불투명하고 일자리 수도 과장된 숫자놀음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50조원의 소요원 13조3천억원 외에 나머지 45조7천억원의 재원 마련 대책이 없다”며 “당장 올해 추가 소요재원 1조

9천억원의 조달방안도 마련하지 못한 채 1월초부터 추경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무책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지난해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으로 100조원,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으로 111조원을 투입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며 “여기에도 50조원의 녹색뉴딜까지 추진하면 재정자가 악화되고 국가채무 급증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시 2조4천억원 푸다

올 집행 재정 92% 상반기 발주

광주시가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해 올해 집행할 총 재정 2조6천696억원의 92%인 2조4천609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발주한다.

광주시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9년 재정 조기집행계획’을 확정했다.

이 같은 계획은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목표보다 발주의 경우 2.2% 포인트, 집행은 4.0% 포인트 상향 조정된 것으로 현재의 경제상황을 재난에 준하는 위기 상황으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를 위해 경기 부양효과가 큰 SOC 사업과 응용, 물품구입 등 주요 사업 510건(4천793억원)은 수시로 보고회를 개최하고 사업장을 직접 점검해 조기 집행을 독려할 방침이다.

특히 수의계약 대상을 10월31일까지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긴급 입찰 기간을 평균 10일에서 5일로 단축해 행정 절차를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업체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선금지급 하한율을 10% 포인트 인상하고 담보능력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착공과 동시에 선금을 70%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또 재정운용방식을 대폭 개선해 조기발주를 활성화하고 유동성 흐름을 개선해 침체된 내수경기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월예산을 1월까지 모두 확정기로 했으며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모든 사업은 성립전 집행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조기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중앙 부처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견의할 방침”이라며 “올 상반기에 경기부양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운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안동 ■ 간고등어

부담없어 좋다! 설날선물 최고!

새해 福 많이 받으십시오.

전국택배 054-853-0545
우체국택배 1588-1300
www.gedunga.co.kr

안동 ■ 간고등어